

與野, R&D 예산 둘러싼 여론전 공방

“신성장동력 발굴 우선” vs “해괴한 일... 복원 약속할 것”

국민의힘 ‘연구현장 소통간담회’ 젊은 연구자 등 미래세대 의견 수렴 민주당, 대전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성장발전 토대, 과학기술” 野 과기위 예산소위서 단독 증액 與 반발하며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

여야가 15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싸고 여론전 공방을 벌였다.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연구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 등 다양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치열하기 짝이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맘껏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5일 오후 ‘국민의힘,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됐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며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동력을 키워 줄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여서 기초원천기술 개발에도 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 R&D 예산 편

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특히 과학기술연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에서 열었다. 연구기관이 많은 대전에 방문해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R&D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

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가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 걱정거리를 털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속 성장발전할 토대를 갖추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연구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

장과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끊임 없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내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R&D 분야 예산을 증액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기위 예산소위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 의결한 뒤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메가시티’ 구성에 단계적 편입방안 검토

뉴시티특위-오세훈 시장 만나 6년~10년간 자치권·재정중립성 보장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년~6년 유예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는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기간을 6~10년 정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티특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장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오 시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시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

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균부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은 뽀니 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없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의원 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즉각 추진해야”

“국민께 선의의 정책 경쟁 약속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김두관·김한규·이하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현재 5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러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

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 늘려보려는 꼼수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오 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혁신위, 정제되지 않은 발언 바람직 안 해”

김기현 “지도부, 총선 지휘해 나갈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그것이 반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광복 100주년 의 꿈 G3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호 안건과 관련해 혁신위 전체량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혁신위가 당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총선은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